

2016 대만 선거결과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



2016 대만 선거_(대선 · 총선) 결과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

2016. 2

kotra

순서

[요 약]	1
-------	---

I. 2016년 대만 선거 결과	2
-------------------	---

II.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	3
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
2.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
3. 국제통상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

III. 전망 및 시사점	8
---------------	---

[참고] 양안 경제교류 현황	11
-----------------	----

[요약]

□ 2016년 1월 16일 대만 대선 결과, 차이잉원 당선 및 민진당 압승

○ 대선 : 차이잉원, 56% 득표율로 당선, 대만 첫 여성총통 탄생(취임:5.20)

정당	국민당(중화국민당)	민진당(민주진보당)	친민당
후보자명	주리룬(朱立倫)	차이잉원(蔡英文)	송추위(宋楚瑜)
득표수	3,813,365	6,894,744	1,576,861
득표율	31.0%	56.1%	12.8%

○ 입법원(국회) 총선 : 민진당이 68석으로 다수의석 확보(임기개시: 2.1)

* 제9대 입법원 : 총 113석 / 민진당(68), 국민당(35), 시대역량(5), 친민당(3), 기타(2)

□ 신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

○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

- 노동개혁(청년실업·저임금해소)과 주거안정(8년 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등)

○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

- 5대 신산업 육성, Smart Taiwan(주력산업 기반 산업구조 개편), 청년창업 지원확대

○ 국제통상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

- 對中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각화 노력(TPP참여, 양자간 FTA확대 등)

- 중국과의 ECFA 후속협상(상품·서비스무역협정) 마무리도 과제

□ 전망 및 시사점

○ (총괄) 민진당의 다수당 확보로 신정부 내부 국정운영은 유리하나, 양안관계를 포함 대외관계는 조심스러운 행보 예측(정치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)

- 한편, 취임까지 공백기(4개월)가 길어 당분간 정치·경제적 불확실성 지속 전망

○ 대만경제 : 新정부 출범 후 소비시장 활성화 및 신산업 비즈니스 확대 예상

○ 양안관계 : 일정기간 상호 탐색기 예상, 양안경제협력 양상 변화에 주목

○ 한·대만 관계 :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(상호학습) 예상, 경제협력 가능분야 발굴 필요

I. 2016년 대만 선거 결과

□ 대선 : 제14대 총통 선거(1.16.토)

○ 민진당 차이잉원의 압승으로 대만 첫 여성총통 탄생(득표율 56%)

- 新정부 정식 출범일 : '16.5.20(금)

- 국민당 8년 집권이 끝나고 민진당으로 정권교체

* 대만 총통임기 4년, 1회 연임 가능(최장 8년) / 재선시 2024년까지 집권 가능

<2016년 대만 대선 개표 결과>

정당	국민당(중국국민당)	민진당(민주진보당)	친민당
후보자명	주리룬(朱立倫)	차이잉원(蔡英文)	송추위(宋楚瑜)
득표수	3,813,365	6,894,744	1,576,861
득표율	31.0%	56.1%	12.8%

자료원 : 대만 중앙선거위원회

□ 총선 : 제9대 입법위원(국회의원) 선거(1.16.토)

○ 같은 날 시행된 입법위원 총선도 민진당이 68석으로 총 의석 중 60.2% 확보

- 입법원에서도 민진당이 압승을 거둬서 따라 新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 받을 전망

* 득표율 2위 국민당이 친민당(4위; 국민당에서 분리된 정당)과 연합하더라도 민진당에 역부족.

- 9대 입법원 : 총 113석 / 민진당(68석), 국민당(35석), 시대역량(5석), 친민당(3석), 기타(2석)

- 新국회 출범일 : '16.2.1(월)

- 해바라기 학생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신당 시대역량(時代力量), 제3당 지위 확보로 눈길

* '양안서비스무역협정(ECFA 후속 협상)'의 국회 비준 반대 운동('14.3.18~4.10)으로 대학생들이 주도한 사회운동

<9대 입법원 정당별 득표 현황>

정당	민진당	국민당	시대역량	친민당	기타	합계
의석수	68	35	5	3	2	113
점유율	(60.2%)	(31.0%)	(4.4%)	(2.6%)	(1.8%)	(100%)
(참고) 8대 입법원	40	64	-	3	6	113

자료원 : 대만 중앙선거위원회

II.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

1.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

<정책 수립 배경>

□ 부(富)의 재분배 정책 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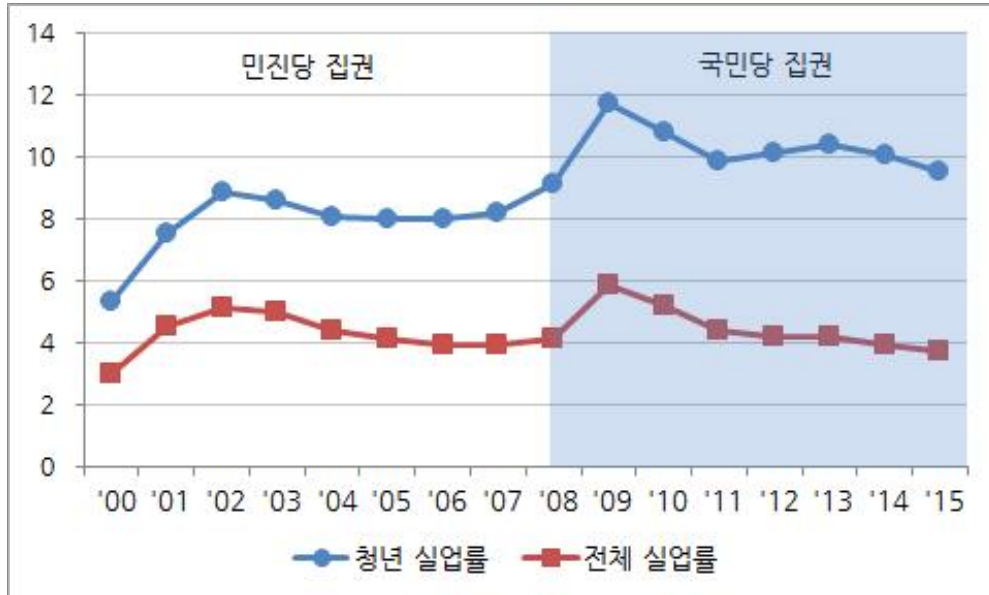
-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점 심화 및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투자위축 · 내수부진 초래
 - 투자 장려 위해 '09년 초, 상속세와 증여세 대폭 인하(최고 세율 50%→10%로), U턴기업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했으나,
 - 자금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면서 기대효과(산업투자 활성화) 부족
 - 부동산 가격 급등 · 빈부격차 심화로 서민 불만 팽배
- 국내외 불경기로 취업기회 축소 · 임금 정체 장기화 · 내 집 마련 기회 요원 심화
→ '성난 민심' 달래기 위한 정부 역할 중요성 확대

□ (노동개혁) 청년실업·저임금 문제 해결

- (정책 방향) '최저임금법*(最低工資法)' 및 '파견법(派遣勞工專法)' 제정 추진
 - * 현행 법정 기본임금(최저임금)은 '노동법(勞動基準法)'에 의거하여 책정되고 있음.
 - 그 외 주요 추진계획
 - 고용주의 '책임 근무제' 남용문제 해결 위한 근로시간 단축(주 40시간제 전면 도입)
 -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·직무훈련 시스템 통합 운영
 - 중노년층의 재취업 기회 확대 위한 '중노년층 취업법(中高齡就業專法)' 제정 등
 - 한편,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에는 기업의 이윤 증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
- (현황) 대만판 88만원 세대(22K)와 청년실업으로 설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불안감 고조
 - (저임금) 대만 사회초년생의 초임은 22K*(22,000대만달러/월) 수준으로 법정 기본임금(최저임금, NT\$ 20,008/월)보다 조금 많은 수준
 - * 22K : 22,000대만달러/월(약 78만원)을 뜻하는 말(우리나라의 88만원 세대와 유사한 개념),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만 정부는 기업계에 청년 인턴 1인당 NT\$ 22,000/월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추후에 사회초년생 임금이 22,000대만달러/월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질됨.
 - (청년실업) 대만의 전체 실업률은 민진당과 국민당 집권 시기를 통틀어 4%선이나, 청년 실업률은 국민당 집권 후 8%에서 10%대로 상승, 청년 취업난이 심화됨

<대만의 청년실업률 추세>

(단위 : %)



주 1) '15년 통계는 '15.1~11월 평균

주 2) 청년 실업률은 20~29세 기준

자료원 : 대만 행정원 주계처

□ (주거안정) 내 집 마련 기회 보장

○ (정책 방향) 8년 내 20만 가구 사회주택(공공임대주택) 건설

- 부동산 가격 급등에 비해 임금수준 정체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대만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.08%에 불과, 정부의 주택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태

*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.4%

- 신정부가 계획한 20만 가구 중 60~70%(약 12만~14만 가구)는 국유지를 활용하여 신설, 20~30%(약 4만~6만 가구)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, 10~20%(약 2만~4만 가구)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

○ (현황) 부동산 가격 급등 대비 임금 상승 정체로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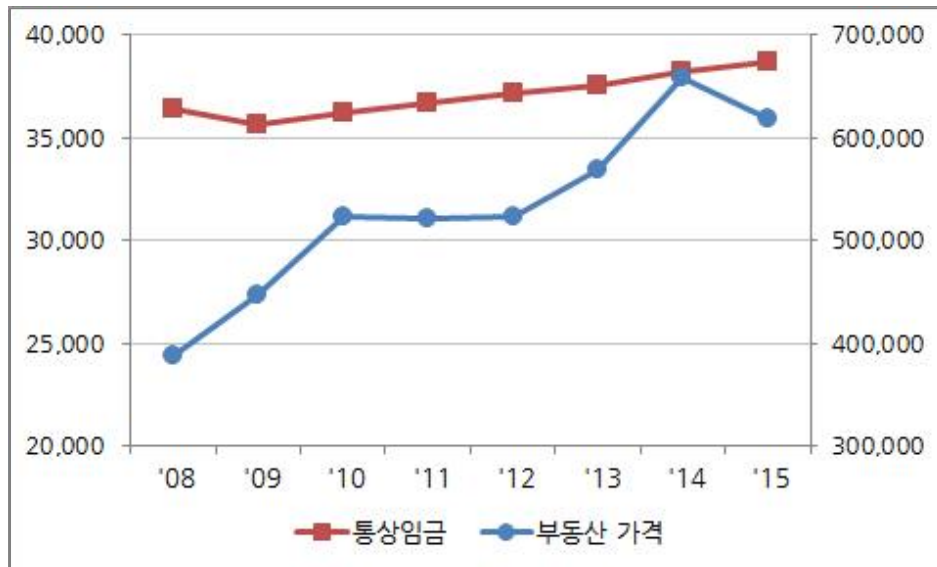
- 국민당의 정권교체 성공 당시('08.2분기) 타이베이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43.79만 대만달러(약 1700만원)였으나, '14.2분기에는 67.07만 대만달러(약 2500만원)으로 6년만에 53% 급등

* '15.3분기 최신 부동산 가격은 60.30대만달러/평(약 2200만원)

- 한편, 통상임금 상승률은 '01년 이래 2% 미만('01년-'15.1~10월 기준, 연평균 성장률 0.95%) 수준이 지속되는 상태이며, 금융위기 당시 '09년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($\Delta 2.08\%$)을 기록함.
- * '15.1~10월 기준, 통상임금은 38,663대만달러(약 140만원)로, 국민당 집권 8년 동안 임금 인상폭은 2,276대만달러(약 8만원)에 불과.

<대만의 통상임금과 부동산 가격(평당) 상승세 비교>

(단위 : NT\$)



주 1) '15년 통계, 통상임금은 1~10월 평균, 부동산 가격은 Q1~Q3 평균 기준

주 2) 부동산 가격은 타이베이시 매매계약 가격 기준

자료원 : 대만 행정원 주계처

2.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

<정책 수립 배경>

□ OEM 주도의 산업구조 → 글로벌 밸류체인 내 고부가가치 생산 위치로의 전환필요

- OEM 강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, '90년대 중반부터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조업의 해외 이전 현상(對中 투자 위주) 가속화
 - OEM 기반 산업 구조는 GVC(Global Value Chain) 참여도를 높인 반면,
 - 코스트 다운을 위한 산업 공동화 현상을 심화하고,
 - 국내 노동시장의 침체(실업률 상승, 임금 인상 정체)에 따른 내수시장의 불황을 초래
-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공식이 내수주도형으로 변한 지금, 대만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
 -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, 혁신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의 필요성 증가

□ Smart Taiwan(주력산업 기반 산업구조 개편)

- (정책 방향) '혁신·취업·분배' 개선·개혁을 골자로 하는 '인더스트리 4.0'의 신정부 버전
 - 대만의 주력산업(ICT 산업)에 기반하여 하이테크 산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
 -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'인센티브 제도' 마련
 - 중소기업·대학·연구기관·정부(금융 정책)의 역량을 결집하여 '혁신 생태계' 구축
 - 혁신력을 키우기 위해 산학 협력을 통한 내국인의 '실무능력 향상', '해외 우수인재 유치' 장려

□ R&D 및 혁신을 통한 5대 신산업 육성

- (정책 방향) 5대 신산업(녹색에너지·방위·첨단·바이오·스마트 정밀기계) R&D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
 - (녹색에너지) 에너지 자급률(현재 3% 미만) 제고와 2025년 탈핵화를 목표로 정부의 추진력을 강화*할 계획, 타이난(台南)에 산업단지 조성 예정
 - * 前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를 신흥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한 바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, 新정부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중점 사업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
 - (방위) 미국과의 무기 구매 협력을 강화하되 항공우주·조선·정보보안 산업의 통합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자급률과 경제적 가치를 높일 계획
 - (첨단)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타오위안(桃園)*에 '아·태 지역 청년 혁신 IPO센터' 조성, 美 실리콘밸리 기업의 對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하여, 자본·두뇌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세계 첨단산업 밸류체인에서 기여도를 높일 계획
 - * SW산업단지가 소재한 타이베이와 ICT제조업이 밀집된 신주(新竹) 사이에 위치하며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아시아 주변국의 주요 도시와도 접근성이 좋음.
 - (바이오) '아·태 지역 바이오/의료/제약 R&D산업 센터' 조성을 목표로 국내 산업의 클러스터화*와 GVC(글로벌 밸류체인)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
 - * 타이베이의 '국가 바이오 R&D단지'를 주축으로 신주(新竹)의 바이오메디컬단지, 타이중과 타이난의 과학단지 간의 연계성 제고
 - (스마트 정밀기계) 타이중(台中) 지역을 베이스캠프로 정부/연구기관/업체가 역량을 집결하여, 부품소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제고할 계획

3. 국제통상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

<정책 수립 배경>

□ 양안 교류 확대의 이면, 對中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→수출 영토 확장의 필요성 대두

- 마잉지우 정권 시기('08.5.20~'15.5.19, 8년), 다양한 양안 교류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으나, 관광(중국 요우커 유치)을 제외한 무역·투자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실망감 상승
- '15년 들어서는 대만 주력 산업(반도체 위주)에 대한 중국의 M&A 러브콜도 잇따르게 되자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 확산,
- 대만 경제가 중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짐.
- 구조적으로 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*에서 ≡대만 기업의 중국 기업화(본부를 중국으로 이전), ≡주요 선진국(美·日·유럽 등 최종 수출시장)의 경기 회복세 취약, ≡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홍색공급망(배타적인 현지화 공급사슬)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- 수출 시장의 다각화 필요성이 높아짐.
- * 대만의 수출 구조 : 대만(오더 수주·해외 생산거점으로 부품소재 수출)→중국 위주 해외 생산거점(조립·가공)→최종 수출시장(美·日·유럽)으로 완제품 수출

※ 참고자료 : 양안 경제교류 현황

□ 메가FTA 조속 참여, 양자간 FTA 확대 노력

- (정책 방향) 메가FTA 가입은 신정부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
- 차이잉원, 訪美·訪日(각각 '15.5월말, '15.10월초) 당시 TPP 신규 가입 의사*를 개진
- 메가 FTA 참여 추진과 동시에 양자간 FTA 확대 노력도 기울일 계획
- * TPP는 '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'이 쟁점

※ (참고) 대만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

- FTA : 파나마('03년), 과테말라('05년), 니카라과('06년), 엘살바도르·온두라스('07년)
- ECA : 인도네시아·필리핀(공동연구 완료), 유럽연맹(협상 타진)
- 기타 경제협력협정 : 중국(ECFA, '10년), 뉴질랜드(ANZTEC, '13년), 싱가포르(ASTEPA, '14년)

○ (선행 과제) ECFA 후속 협상(상품·서비스 무역협정) 마무리

- '양안협정감독조례' 제정을 선행한 후 '양안 상품·서비스 무역협정'의 체결과 발효를 추진할 예정
- * 前정부의 양안 경험 성과를 이어갈 의사를 표한 바 있으므로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은 저조할 것
- (양안서비스무역협정) '11.2.22일 협상 개시 후, '13.6.21일 정식 서명
- * 입법원(국회)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등 심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입법원 계류 상태, '양안협정감독조례' 제정 후 재진행할 계획
- (양안상품무역협정) '11.2.22일 협상 개시 후, 12차 협상까지 진행
- * 중국산 농산물 개방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협상 체결의 관건

□ 인도·아세안과 협력 강화

- (정책 방향) 전담팀 구성, 아세안과 인도 반도 국가*와의 관계 강화 추진 계획
 - * 인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 등
- 무역·투자 뿐 아니라 민간 교류와 문화·교육·연구 등 다방면에서 협력예정

※ (참고) 대만의 對동남아 외교·경제 정책 : 남향(南向) 정책

- '93년 리덩후이(李登輝) 前총통 시절부터 실시(교역·투자 분야에 국한됨)
- 천수이벤 前총통 시기 : 對中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으로 투자 분산을 시도했으나 성과 미미
- 마잉지우 前총통 시기 :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(ASTEP) 체결, 인도네시아·필리핀과 경제협력협정(ECA) 공동연구 완료 등

III. 전망 및 시사점

□ 대만경제 : 新정부 출범 후 소비시장 활성화 및 신산업 비즈니스 확대 예상 (정책추진 본격화 시기는 5월 총통 취임 이후 예상)

- 임기 초기 노동개혁 및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부양 정책과 신산업 육성·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투자확대가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소비심리 자극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新국회내 민진당 다수당 확보로 신정부의 국정운영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, 총통 당선 후 취임까지 정책 공백이 길어(4개월), 연내 성과창출에 주력 예상
 - 신정부의 국정운영은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
- 국내외 당면 이슈(서민경제 안정, 수출 활성화, 對中 의존도 해소 과제 등)의 난이도가 높고, 글로벌 경기회복 등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대만 신정부의 '경제 살리기' 과제 해결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
 - 대만 행정원 주계처, '16년 대만 경제성장률을 2.32%로 전망('15.11.27일)
 - 총통부 직속 최고연구기관 '중앙연구원'은 1.74%로 가장 낮은 전망치 제시('15.12.24일)
 - 블룸버그, '16년 대만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55%로 예측, 전년대비 30%p 높게 보며 러시아·브라질·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경기침체국가로 분류('16.1.11일)

* (참고) '16년 한국의 경제침체 가능성 18%

□ 양안관계 : 일정기간 상호 탐색기 예상, 양안경제협력 양상 변화에 주목

- 국민당의 친중 성향과 달리 민진당은 양안관계 현상유지가 기본원칙
 - 차이잉원이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국민당의 양안정책 여론 반응을 위해 일정기간 냉각 또는 탐색기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
 - 미·일과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외교 정책의 기초변화는 없을 듯
- 차이잉원이 현재 국민당이 인정한 '하나의 중국' 원칙에 대해 수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므로, 양안관계의 불안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
 - 오는 '16.5.20일 차이잉원 당선자의 총통 취임사에서의 양안관계 언급이 중요하며,
 - 향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
 - * 진행 중인 주요 양안 정책 : 양안상품무역협정(미체결), 양안서비스무역협정(미발효), 양안조세협정(미발효), 상호 대표부-해협양안관계협회(중국)/해협교류기금회(대만)-의 파견관 상주(미체결), 요우커 환승객 유치 개방(미시행)
- 현재 답보 상태인 양안상품·서비스무역협정(ECFA 후속협정)은 신정부 출범 후 양안관계 변화수준에 따라 속도 및 진행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

□ 한-대만 관계 :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(상호학습) 예상, 경제협력 가능분야 발굴 필요

- 한국은 대만의 5대 교역국, 대만은 한국의 8대 교역국('15년 기준)으로, 생산재 제품이 교역의 큰 비중을 차지*
 -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은 주력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쟁상대로 인식되나 상호 산업내 교역도 활발
 - * 산업내 주요 교역품목 : 반도체, 기구부품, 철강판, 합성수지, 기초유분, 정밀화학원료 등
 - * 한국의 대대만 수출 주요 품목별 비중(%) : 반도체(27.4%), 석유제품(9.9%), 기초유분(5.7%), 정밀화학원료(3.7%), 반도체제조용장비(3.1%), 석유화학중간원료(2.6%), 철강판(2.6%)
- 대만은 對미국·일본 관심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新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(한국학습)에 나설 것으로 예상
 - 대만 내 한국인식은 크게 4단계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판단
 - * 아시아 대표적 자유민주 혈맹관계('92 단교 전) → 반한 분위기 급속확산(단교 후) → 경쟁의식 확대(2010년대 초반까지) → 한국과 경쟁에서 뒤졌다는 인식 확산('10년대 중반이후)
 - 1.16 선거 유세 중 과거와 같은 이른바 '한국 때라기가 거의 없었고 한국의 경제력과

경쟁력이 대만을 크게 앞섰다는 판단 따라 대만 신정부는 '한국 학습에 나설 가능성

* '한국학습'은 FTA 등 통상정책 및 관련 국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, 환율정책, 기업 글로벌 시장 전략,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

- 한국 또한 대만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·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요인 등에 대한 학습필요
- 대만이 TPP 등 국제통상협정 가입시 대만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, 한-대만 상호교역 및 교류가 활성화되는 양면의 효과도 예상됨
- 신정부 중점 육성산업인 5대 신산업(바이오, 녹색에너지, 스마트정밀기계 등) 및 ICT 산업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모색 필요

□ 대만의 對중국 무역·투자·관광 개방현황

○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 및 해외투자진출 대상 지역

- 대만의 對중국 개방시점 : 무역('85)*, 대만의 對중국 투자('91), 중국의 對대만 투자('09)

* 대만의 對중국 간접무역 : 1985년 시작

* 양안무역허가방법(台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) 제정: 2001년

* 중국과 대만 WTO 가입 후 직접무역 개방: 2002년

○ (수출)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26%, 홍콩 포함 시 40%로 매우 높음

<대만의 연도별 대중국 수출의존도>

(단위: 억 달러)

연도	2011	2012	2013	2014	2015
총 대외 수출액	3,082.6	3,011.1	3,054.4	3,136.9	2,804.8
대중국 수출액	839.6	807.1	817.8	821.2	712.2
점유율	(27.2%)	(26.8%)	(26.8%)	(26.2%)	(25.4%)
대중국 수출액(홍콩포함)	1,240.4	1,186.1	1,212.2	1,246.5	1,092.9
점유율	(40.2%)	(39.4%)	(39.7%)	(39.7%)	(39.0%)

* 경제 전문지 '포브스(Forbes)' 발표 '對中 수출·경제 의존도 Top 10 국가' 중 2위('15.11.26일)

· 호주 : 對中 수출 비중 34%(1위), GDP의 對中 의존도 6%

· 대만 : 對中 수출 비중 26%(2위), GDP의 對中 의존도 16%(1위)

· 한국 : 對中 수출 비중 25%(3위), GDP의 對中 의존도 11%

○ (수입) 대만은 별도 규정을 두고 對중국 수입가능 품목을 제한

- 최초 개방 당시 전체 수출입품목 중 중국 제품예의 개방 비율이 0.19%에 불과하였으나, 현재 80.9% 이상의 품목 개방 중

* 관련규정 : “양안무역허가방법(台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)”, “조건부중국제품수입허가항목, 수입관리법규총괄표(大陸物品有條件准許輸入項目、輸入管理法規彙總表)”

○ (對중국투자)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, 1991년부터 2015.12월까지 대중국 총 투자액은 USD 1,549억, 투자건수는 41,686건으로, 대만의 해외투자 총액 및 건수의 각각 61%, 75%를 차지

<대만의 중국투자 현황 및 비중>

	2015.1월~12월		1991년~2015년	
	금액	건수	금액	건수
전체 해외투자	USD 211.4억	783건	USD 2,523억	55,646건
대중국 투자	USD 104.0억	321건	USD 1,549.2억	41,686건
비중	49.2%	41.0%	61.4%	74.9%

자료원 :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(수치는 허가기준)

- 1991년 대만기업의 중국투자 허용 전에도 많은 대만기업들이 홍콩을 경유,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제3국 경유 포함 시 공식 통계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
- 중국 내 타이상(臺商, 대만기업) 협회 139개(2013), 상주 대만기업인은 약 30만명에 달함. (가족 제외) *기타 장기거주 대만기업, 가족, 유학생, 비정상영업기업 등을 포함 시 50만~100만명 추산
- 한편, 종래 금지되었던 대만 LCD산업의 대중투자 진출이 '11.3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, '15.12월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중국 난징에 12인치 웨이퍼공장 설립허가를 신청, 현재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검토 진행 중
- (투자유치) 대만은 2009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를 허용, 현재 총 408개 항목에 대해 완전 혹은 부분 개방(제조업 97%, 서비스업 51%, 공공건설 51%)
-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네거티브 형태로 업종별 금지 및 제한 항목을 두는 것과 비교, 중국자본은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(원칙적으로 금지, 선별적 허용)
- * 2009년~2015.12월 중국자본 유치실적은 USD 14.4억(789건)으로, 총 FDI의 3.5%

<대만의 중국자본 투자허용 추이>

차수	시기	개방항목수	내용
1	2009.6.30	192개	제조업, 서비스업, 공공건설 분야
	2010.5.20	12개	금융업(은행·증권·선물거래) 분야
	2011.1.1	1개	ECFA 서비스업 조기 개방항목 내 운동 서비스업
2	2011.3.7	42개	웨이퍼 파운드리, DRAM, 패키징·테스팅, 디스플레이, 공작기계 반도체설비 제조(주식 취득 10% 이하, 합작 시 50% 미만)
3	2012.3.30	161개	제조업, 서비스업, 공공건설 분야
총계		408개	제조업 204개, 서비스업 161개, 공공건설 43개 분야

자료원: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, 중국 기업의 대만 내 투자 정보 가이드(陸商來台投資資訊手冊)

- (관광) 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범위 지속 확대('08.7월~현재)
- 2008년 중국인 단체관광 개방에 이어 2011년부터 베이징, 상하이, 샤먼 주민에 한해 대만 개별 자유관광을 허용하기 시작, 매년 순차적으로 도시 및 개방인원수 확대 중
- * 현재 중국 47개 도시 주민에게 대만 자유관광 허용(하루 5000명, 체류기간 15일 제한)

- 2014년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(991만명) 중 중국인은 399만명으로 40% 차지
- (기타) 양안삼통협정(인원·물자·우편)(‘08), 양안금융협력협정·항공협정(‘09), 의약위생 협력협정(‘10), 양안투자보장협정·세관협정(‘12), 양안화폐청산협력협정(‘12) 등

□ ECFA(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) 및 후속협정 진행현황

- ECFA 협상·발효 및 평가
 - (2010.1월) 협상개시 → (2010.6.29) 협정체결 → (2010.9.12) 정식발효 → (2011.1.1) 조기자유화 프로그램(EHP)* 발효 → (2012.8.9) 양안투자보장협정·세관 협력협정 체결 → (2013.1.1일부) 조기수확품목(807개) 전면 무관세화
 - * EHP(Early Harvest Program)
 - 상품분야 : 중국측 539개 품목, 대만측 26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3년 간 점진적 인하
 - 서비스분야 : 중국측은 은행업 등 11개 분야, 대만측은 유통 등 9개 분야 시장 개방
- (ECFA 후속협정) 양안상품무역협정 진행현황
 - 2011.2.22 1차 협상 개시 후, 현재까지 12차 협상(15.11.21~23)을 진행하며 난항
 - 중국산 농산물 개방여부가 주요협상 쟁점
- (ECFA 후속협정)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진행현황
 - 2011.2.22.일 1차 협상을 개시한 후, 2013.6.21.일 정식 서명하였으나, 입법원(국회) 비준 처리과정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*하는 등 심한 반대여론에 부딪침.
 - 여야가 양안 협정에 대한 ‘양안관리감독조례’ 제정 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입법원 계류 상태
 - * 해바라기(태양화) 학생운동(14.3.18-4.10)
- ECFA 평가 및 향후전망
 - 대만 경제부 등은 당초 ECFA 체결효과로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GDP가 약 80억 달러, 산업생산액 3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글로벌 경기불황 및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
 - ECFA 협정에 대한 신정부와 국회, 중국의 입장 차이에 따라 향후 협상 진행의 속도 및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/끝/



작성자

- ◆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연구원
- ◆ 타이베이무역관 정다운 과장
- ◆ 중국사업단 정도숙 박사

KOCHI 16-002

2016 대만 선거(대선/총선) 결과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

발 행 인 | 김재홍
편 집 인 | 윤원석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16년 2월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| (우 137-749)
전 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ISBN : 979-11-86926-99-4(95320)

Copyright © 2016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2016 대만 선거결과와
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